



낙태 허용 조건과 프랑스, 독일, 일본 입법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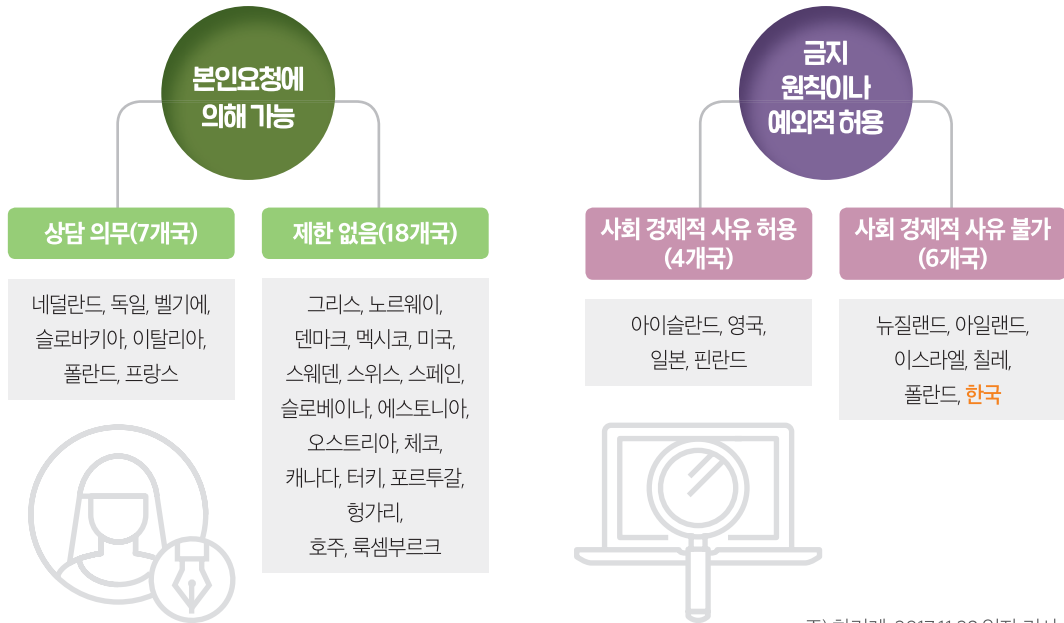
2019. 10. 8. 제105호

최신 외국입법정보

발행처 국회도서관 | 발행인 허용범 | 작성자 김민아*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형법」의 낙태죄 규정(제269조, 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형법」과 특수상황에서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문에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 하지만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예외적 사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기간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이다.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한 개정의 필요성은 현행법상 낙태허용시기, 낙태허용요건으로서 “사회·경제적”사유를 추가할 것인지 등의 여부이다. 이에 이와 관련된 외국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OECD회원국 인공임신중절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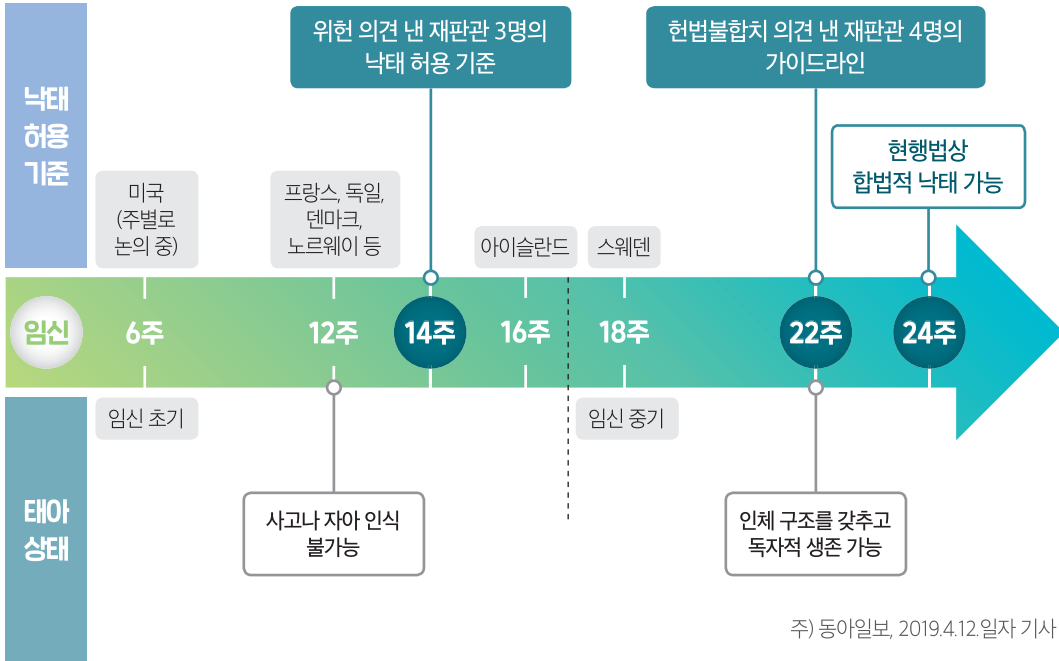


주) 한겨레, 2017.11.28.일자 기사

시사점

- 현재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낙태가 허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적·경제적 사유로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와 관련된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이 법률을 당장 무효화하면 사회적 혼란이 크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할 시간을 주는 목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 프랑스는 「형법」상 임부의 동의 없는 낙태만을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 자기 낙태나 임부의 부탁으로 낙태행위를 한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다만 프랑스는 「공중보건법」에서 수정 후 12주 이내에 상담을 전제로 낙태를 허용하여 우리나라보다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매우 넓게 보호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부가 낙태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1주일의 숙려기간을 반드시 가지도록 규정하여 임부의 낙태율을 줄이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있다.

임신 기간별 태아 상태와 각국의 낙태 허용 시기



- 독일은 낙태 문제를 사람의 생명권에 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형법」상 명시적 규정을 두고 낙태를 원칙적으로 처벌하면서도 12주 이내의 낙태와 상담요건을 결합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 일본은 낙태에 대한 법제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나 「모체보호법」을 통해 지정의사에 의한 낙태 그리고 낙태허용 사유에 경제적 이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 배우자 동의요건이 완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낙태행위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등이 충돌하는 헌법상 문제이기도 하는 만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낙태허용에 대한 개정이 절차적 명확성과 효용성 등을 확보하는 방향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국내 낙태관련 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와 위와 같은 외국의 입법례, 즉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12주 이내의 기간”과 같은 낙태허용기간의 명시와 “상담”요건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입법적 공백 없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프랑스 「Code Pénal」(「형법」) & 「Code de la santé publique」(「공중보건법」)

- 프랑스는 1993년 개정으로 「형법」상 동의 없는 임신중단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남겨 놓고, 다른 임신중단규정들은 모두 삭제하였다(제223-10조).
- 다만 「공중보건법」 제2권 임신중절 부분에서 임신 12주 미만에 행해지는 임신중절과 의학적 이유로 실시되는 임신중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먼저 프랑스는 임신 12주 미만에 행해지는 임신중절에 대해 임산부의 요청과 임신중절 전과 후에 이루어지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L2212-1조 ~ 제L2212-4조).
- 한편 「공중보건법」 제L2213-1조에서는 임산부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 그리고 태어날 아이가 진단시점에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중대한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즉 의학적 이유로 실시되는 임신중절은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 「Strafgesetzbuch」(「형법」)

- 독일은 「형법」 제218조를 통해 낙태행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면서도, 제218조a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즉 착상 후 12주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임산부는 최소 수술 3일 이전에 상담을 거친 사실을 의사에게 입증한 것을 전제로 의사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제218조a 제1항).
- 다만 독일은 12주 이내의 낙태라 할지라도 의학적 사유와 범죄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담요건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8조a 제2항, 제3항).
- 상담이 배제되는 의학적 사유는 “임산부의 현재와 장래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의사의 진단결과, 임산부의 생명에 대한 위협 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의 중한 훼손의 위험을 방어하기에 적절하고 다른 기대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위험을 방어할 수 없는 경우”이다.
- 또한 상담이 배제되는 범죄학적 사유로 제시되는 것은 강간 등 성적 남용에 따른 위법행위로 임신(「형법」 제176조 내지 제179조)이 된 경우이다.
- 한편 독일은 법원으로 하여금 임산부가 낙태수술 당시 특별한 곤경에 빠져있었던 경우에는 제218조에 의한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제218조a 제4항).

일본 「母体保護法」(「모체보호법」)

- 일본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형법을 통해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모체보호법」을 통해 낙태허용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형법」상 동의낙태죄의 적용이 유명무실하다.
- 일본 「모체보호법」 제14조에서는 낙태가 허용되는 시기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낙태허용요건으로 “경제적사유”를 포함하고 있고, 배우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신 후 배우자가 없게 된 때에는 본인만의 동의로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낙태허용요건이 엄격하지 않다.
- 또한 일본은 「모체보호법」 제14조를 통해 임신중절을 실시할 경우 지정의사(도도부현을 구역 단위로 설립된 공익사단법인 의사회가 지정하는 의사)제도를 두고 있다.

국내 현황

-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예외적인 낙태허용 요건은 “경제적 사유”를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이외의 배우자의 동의에 있어 배우자가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도 본인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을 두고 있다.
- 현재 결정 이후 국회에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1건이 발의되어 있다.¹⁾

현재 결정 이후 ‘낙태’ 관련 입법 논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9829)

- ‘낙태의 죄’
→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 명칭 개정
-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 삭제
(안 제269조 및 제270조 제1항 삭제)
- 부동의 낙태죄 처벌 강화
(안 제270조 제2항 및 제3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9802)

- 인공임신중절의 보장과 제한에 대한 규정 마련 및 이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안 제13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신설)
- 임신 14주 이내 임신부 판단으로 낙태 허용
(안 제14조 제1항)
- 임신 22주 이내 낙태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 포함
(안 제14조 제2항)
- 임신 22주 초과한 경우, 보건의학적 사유에 의한 낙태허용(안 제14조 제3항)

1) 이정미의원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9829)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9802)을 2019년 4월 15일 대표발의 하였다.

프랑스, 독일, 일본 입법례의 원문과 번역문

「Code Pénal」

Article 223-10

L'interruption de la grossesse sans le consentement de l'intéressée est punie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Code de la santé publique」

Livre II : 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Chapitre II : Interruption pratiquée avant la fin de la douzième semaine de grossesse.

Article L2212-1

La femme enceinte qui ne veut pas poursuivre une grossesse peut demander à un médecin ou à une sage-femme l'interruption de sa grossesse. Cette interruption ne peut être pratiquée qu'avant la fin de la douzième semaine de grossesse.

Article L2212-2

L'interruption volontaire d'une grossesse ne peut être pratiquée que par un médecin ou, pour les seuls cas où elle est réalisée par voie médicamenteuse, par une sage-femme.

Article L2212-3

Le médecin ou la sage-femme sollicité par une femme en vue de l'interruption de sa grossesse doit, dès la première visite, informer celle-ci des méthodes médicales et chirurgicales d'interruption de grossesse et des risques et des effets secondaires potentiels.

Article L2212-4

Il est systématiquement proposé, avant et après l'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à la femme majeure une consultation avec une personne ayant satisfait à une formation qualifiante en conseil conjugal ou toute autre personne qualifiée dans un établissement d'information, de consultation ou de conseil familial, un centre de planification ou d'éducation familiale, un service social ou un autre organisme agréé. Cette consultation préalable comporte un entretien particulier au cours duquel une assistance ou des conseils appropriés à la situation de l'intéressée lui sont apportés.

Chapitre III : Interruption de grossesse pratiquée pour motif médical.

Article L2213-1

L'interruption volontaire d'une grossesse peut, à toute époque, être pratiquée si deux médecins membres d'une équipe pluridisciplinaire attestent, après que cette équipe a rendu son avis consultatif, soit que la poursuite de la grossesse met en péril grave la santé de la femme, soit qu'il existe une forte probabilité que l'enfant à naître soit atteint d'une affection d'une particulière gravité reconnue comme incurable au moment du diagnostic.

프랑스 「형법」

제223-10조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부녀로 하여금 낙태하게 한 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프랑스 「공중보건법」

제2권 임신중절

제2장 임신 12주 미만에 행해지는 임신중절

제L2212-1조

임신을 지속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임신부는 의사나 조산사에게 임신중절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임신중절은 임신 12주가 종료되기 전에만 실시될 수 있다.

제L2212-2조

임신중절은 의사만 또는 약물에 의한 방법을 쓰는 경우 조산사만 실시할 수 있다.

제L2212-3조

어떠한 여성으로부터 임신중절을 요청받은 의사나 조산사는 첫 번째 방문 시 임신중절에 관한 의료 및 수술 방법과 그에 따른 위험 및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해당 여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L2212-4조

임신중절 전과 후, 성인 여성에게는 부부 상담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을 이수 받은 모든 사람 또는 정보, 자문이나 가족자문 제공기관, 가족계획 및 가족교육 센터, 사회복지부의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인가받은 기관의 전문가와의 상담이 자동적으로 제한된다. 이 사전상담에는 당사자의 상황에 적절한 도움이나 조언이 제공되는 특별면담이 포함된다.

제3장 의학적 이유로 실시되는 임신중절

제L2213-1조

다전공 의학팀이 권고의견을 제시한 후, 이 팀을 구성하는 의사 중 두 명이 임신부가 임신을 지속하는 경우 임신부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결정할 경우와 태어날 아이가 진단 시점에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중대한 질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임신중절은 언제든 실시될 수 있다.

「Strafgesetzbuch」

§ 218 Schwangerschaftsabbruch

(1) Wer eine Schwangerschaft abbri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Handlungen, deren Wirkung vor Abschluß der Einnistung des befruchteten Eies in der Gebärmutter eintritt, gelten nicht als Schwangerschaftsabbruch im Sinne dieses Gesetzes.

§ 218a Straflosigkeit des Schwangerschaftsabbruchs

(1) Der Tatbestand des § 218 ist nicht verwirklicht, wenn

1. die Schwangere den Schwangerschaftsabbruch verlangt und dem Arzt durch eine Bescheinigung nach § 219 Abs. 2 Satz 2 nachgewiesen hat, daß sie sich mindestens drei Tage vor dem Eingriff hat beraten lassen,
2. der Schwangerschaftsabbruch von einem Arzt vorgenommen wird und
3. seit der Empfängnis nicht mehr als zwölf Wochen vergangen sind.

(2) Der mit Einwilligung der Schwangeren von einem Arzt vorgenommene Schwangerschaftsabbruch ist nicht rechtswidrig, wenn der Abbruch der Schwangerschaft unter Berücksichtigung der gegenwärtigen und zukünftigen Lebensverhältnisse der Schwangeren nach ärztlicher Erkenntnis angezeigt ist, um eine Gefahr für das Leben oder die Gefahr einer schwerwiegenden Beeinträchtigung des körperlichen oder seelischen Gesundheitszustandes der Schwangeren abzuwenden, und die Gefahr nicht auf eine andere für sie zumutbare Weise abgewendet werden kann.

(3) Die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2 gelten bei einem Schwangerschaftsabbruch, der mit Einwilligung der Schwangeren von einem Arzt vorgenommen wird, auch als erfüllt, wenn ärztlicher Erkenntnis an der Schwangeren eine rechtswidrige Tat nach den §§ 176 bis 179 des Strafgesetzbuches begangen worden ist, dringende Gründe für die Annahmesprechen, daß die Schwangerschaft auf der Tat beruht, und seit der Empfängnis nicht mehr als zwölf Wochen vergangen sind.

(4) Die Schwangere ist nicht nach § 218 strafbar, wenn der Schwangerschaftsabbruch nach Beratung (§ 219) von einem Arzt vorgenommen worden ist und seit der Empfängnis nicht mehr als zweiundzwanzig Wochen verstrichen sind. Das Gericht kann von Strafe nach § 218 absehen, wenn die Schwangere sich zur Zeit des Eingriffs in besonderer Bedrängnis befunden hat.

독일 「형법」

제218조 낙태

① 낙태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자궁 내 수정란의 착상완료 전에 이를 저지한 행위는 이 법에서 의미하는 낙태로 보지 아니한다.

제218조a 낙태의 처벌면제

① 제218조의 구성요건은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실현되지 아니한다.

1. 임신부가 낙태를 촉탁하고 제219조 제2항 제2문에 의한 확인서를 통해 최소한 수술 3일 이전에 상담을 거친 사실을 의사에게 입증한 경우

2. 낙태가 의사에 의하여 시술된 경우

3. 착상 이후 12주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② 임신부의 승낙을 받아서 의사가 시술한 낙태는 임신부의 현재와 장래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의사의 진단결과, 임신부의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의 중한 훼손의 위험을 방어하기에 적절하고 다른 기대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위험을 방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③ 의사의 진단결과 임신부에 대해 제176조에서 제179조에 따른 위법행위가 범하여 졌고 그로 인하여 임신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유력한 근거가 있고 착상 이후 12주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임신부의 동의하에 의사에 의해 시술된 낙태에 있어서는 제2항의 조건은 적용된다.

④ 낙태가 의사와의 상담(제219조) 후에 시술되고 착상 이후 12주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신부는 제218조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한다.

법원은 임신부가 수술당시 특별한 곤경에 빠져있었던 경우에는 제218조에 의한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母体保護法」

第三章 母性保護

第十四条(医師の認定による人工妊娠中絶)

① 都道府県の区域を単位として設立された公益社団法人たる医師会の指定する医師(以下「指定医師」という。)は、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者に対して、本人及び配偶者の同意を得て、人工妊娠中絶を行うことができる。

一 妊娠の継続又は分娩が身体的又は経済的理由により母体の健康を著しく害するおそれのあるもの

二 暴行若しくは脅迫によつて又は抵抗若しくは拒絶することができない間に姦(かん)淫(いん)されて妊娠したもの

② 前項の同意は、配偶者が知れないとき若しくはその意思を表示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又は妊娠後に配偶者がなくなつたときには本人の同意だけで足りる。

일본 「모체보호법」

제3장 모성보호

제14조(의사의 인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① 도도부현의 구역을 단위로 설립된 공익사단법인 의사회가 지정하는 의사(이하 “지정 의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본인 및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1. 임신의 계속 또는 분만이 신체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또는 저항이나 거절할 수 없는 동안에 강간을 당해 임신한 사람

② 전항의 동의는 배우자를 알지 못하는 때나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 또는 임신 후에 배우자가 없게 된 때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다.

국회도서관 × 영등포구립도서관 북 콘서트 도시, 과학과 대화를 시작하다

출 연 진 | 유현준(건축가), 김상욱(물리학자)

공연 및 진행 | 재주소녀

일 시 | 10월 29일 (화) 오후 7시 30분

장 소 |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

대 상 | 도서관 이용자 200명 내외

신청기간 | 10월 1일(화) ~ 마감 시

신청방법 | 1. 영등포구립도서관(대림, 문래, 선유)
방문 및 전화접수
2. 국회도서관 전화접수

신청 및 문의 | 대림도서관 02-828-3716
문래도서관 02-2629-8600
선유도서관 02-2163-0800
국회도서관 02-788-4228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법 률 정 보 실

「최신 외국입법정보」는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
<http://law.na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간등록번호 31-9720116-001702-14

ISSN 2586-6869

